

# 市부담 1000억 이상 늘어...예타 통과로 탄력 받은 사업 '찬물'

## 기재부 '광주 車100만대 사업' 국비 반영비율 대폭 축소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친환경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시비 부담비율 재조정 요구에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어렵사리 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국비 반영 비율을 대폭 줄이겠다고 나섰다.

사업비 축소 등 두 차례 '보완'을 거쳐 우려곡절 끝에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했지만,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광주지역 최대 공약사업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통령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딴지"를 걸고 있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된다.

예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사업비는 총 303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비가 2015억원, 시비가 851억원, 민자 164억원이다. 국비 부담이 67%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말 고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 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의 세부사업 가운데 장비비와 기술개발비의 50%인 939억원만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예비비 276억원과 기업지원비 153억원, 인력양성비 106억원은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시비로 부담하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 조성 평가관리지침 부칙 제4조에 명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에 예타 통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

## 국비 2015억 절반 이상 푼

### 차대통령 공약사업

### 임기 1년 남기고 '딴지'

### 올·내년 예산 집행·반영 미뤄

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경우 광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담액은 예조 851억원에서 1883억원으로 경총 뒤편에 된다.

그나마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10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시비 부담 비율 재 조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내년 예산안 미 반영은 물론 올해 집행되기로 한 국비 30억원의 예산 집행도 늦추고 있다.

이 예산은 광주시가 시비 18억원을 보태 자동차 산업단지 설계비와 기반 구축비로 쓸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예산 집행을 미루면서 진척이 없다.

집행이 늦어진 올해 예산도 문제지만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돼 광주시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광주시가 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 사업비 403억원이다.

여기에 시비 215억원을 더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 확보와 예조 국비부담을 지원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기재부가 근거로 하고 있는 '평가관리지침'의 상위 예규인 산업기술혁신 공동 운영요령 제49조(적용 특례) 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미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내세우며 예조 계획된 2015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포함된 사업인 만큼 별도 사업으로 신설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광주시는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타까지 통과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어 난감하지만, 중앙부처 등을 설득해 사업이 추진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단위:억원)

세부비목	합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			기재부 제시안		
		국비	시비	민자	국비	시비	민자
합계	3,030	2,015	851	164	983	1,883	164
부지비	71		71			71	
공사비	334		334			334	
부대비	37		37			37	
장비비	1,267	1,014	253		633	634	
예비비	276	276				276	
기술개발	699	466	69	164	350	185	164
기업지원	204	153	51			204	
인력양성	142	106	36			142	

\* 예타 반영 항목 중 장비비, 기술개발 항목에만 국비 50%지원(기재부 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미르재단 의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감현장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정무위·여성가족위 등 상임위에서 막판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도 여야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한일 합의' 등 각종 쟁점을 놓고 대립했다.

◇법사위=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송민순 회고록' 내용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 인권 단체가 이번 사건을 고발한 걸로 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과 미르·K

## 새누리 '송민순 회고록' 더민주는 '최순실 의혹' 맹공

### 주택금융공사 '서민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축소 질타

스포츠재단에 대한 최순실씨 등의 개인 의혹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는 높였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검찰총장 다음가는 서열인 고검장 출신을 특수팀장으로 임명해 수사팀을 꾸렸는데 우 수석은 소환 조사도 못 하고 항간에 떠도는 대로 결론이 나면 국민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이 회사에 미르재단의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 미르·K재단 설립자금의 사용처 등은 검찰이 조금만 확인해도 될 정도로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고 강조하면서 "확인마저도 하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제한키로 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달았다.

더민주 김영주 의원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축소하는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라고 했는데 올해 1~9월 공사와 시중은행 간 평균 금리 차이는 고작 0.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평균 3.17%이던 금리는 지난해 2.8%로 내려갔으며 "은행권이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크게 올려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줄었다는 공사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보금자리론 자격을 축소하고 적격대출을 중지한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있느라 얼어 죽겠다고 해서 겨울 옷으로 바꿔 입혔더니 서민들이 쓰는 보일러를 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우병우 동행명령권 발동할까

## 21일 청와대 비서실 국감

### 여야 증인출석 막판 기싸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21일)가 이를 앞두고 다가오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우 수석이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에 대한 표결이 이

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야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위 구성은 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11명이고, 야당과 무소속이 각각 16명과 1명이며 표결이 진행된다면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은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정 원내대표가 동행명령권을 위한 표결안 상정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국회 관련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끝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우 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정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른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미르·K재단 국정조사로 의혹 밝혀야"

### 유성엽 의원 "국정조사안 발의, 내년 1월부터 조사"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18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안을 발의해 내년 1월부터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은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감에

서 밝히지 못했던 것을 밝힐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자료제출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역사 관련 기관들에 대해 징벌적 예산 삭감

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을 연말 예산심의·의결 때 국회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

으로 지정해 처리해줘야만 가능하다"며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금년도에 누리과정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주소: 광주광역시 광진로15길 11 (광진동) 태영21병원

유스케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